

<제 618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 ‘희망 2021 나눔캠페인’에 성금 8천4백만원 전달해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달 28일 본점에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광주은행과 광주은행노동조합이 함께 8천4백만원을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이성욱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한상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했으며, 광주은행 임직원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희망 2021 나눔캠페인’에 전달하며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실천에 동참했다.

기아 광주공장

◆ 챌린지 어린이 독립영화 시사회 개최



기아 광주공장(대표이사 송호성, 최준영)은 지난달 23일 지역사회 예술 꿈나무 기아 챌린지 어린이뮤지컬팀이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진 독립영화 ‘바다로 간 아이들’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지역사회 성장세대 육성을

위한 기아챌린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아 챌린지 어린이뮤지컬은 문화 예술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가진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매주 모여서 연습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육을 비대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 기존 뮤지컬 공연에서 영화를 제작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해 어린이들은 각자 영화 배역에 따라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교육 받았다.

오텍캐리어

◆ 헬스케어 시장 진출



오텍캐리어(대표이사 강성희)는 지난달 25일 ‘캐리어 클라웰 안마의자’ 출시했다.

지난해 세탁기·창문형 에어컨 등 품목을 늘려 온 오텍캐리어는 안마의자가 단순히 휴식을 위한 도구를 넘어 홈트레이닝 후 스트레칭을 위해 사용되는 등 헬스케어 가전으로서 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해 시장 진출을 결정했다.

해양에너지

◆ 나주시 도시가스 공급확대 업무협약



해양에너지(사장 김형순)는 지난달 27일 전남 나주시(강인규 시장)와 도시가스 미공급 으로 에너지 소외지역에 놓여있는 지역민들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2차 5개년 공급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원도심 내 에너지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에너지와 나주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다시면, 금천면, 산포면 소재지권 및 원도심 추가구간 등 7개 지역에 총사업비 156억원(시비124억원, 해양에너지 32억원)이 투입되는 제2차 사업에 배관연장 38km구간을 구축하고 1,1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해양에너지와 나주시가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시가스 공급세대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에너지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I. 광주경충 소식

〈제1505회 금요조찬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김봉길)는 1월29일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를 초청하여 「중국신화는 계속되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시장의 기회」란 주제로 제1505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미국은 분열된 미국을 통합시키기 위해 저소득층과 블루칼라의 소득향상을 통한 빈부격차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소득 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현재 미국은 고령화 문제와 함께 젊은 사람들이 생산직 근무를 꺼려하고 생산 능력이 저하된 제조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광대한 시장과 인재·비용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중국 없이는 전세계 제조업 공장이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산업을 주름잡는 단계에 올랐으며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추격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전 세계 각 국가의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미중관계는 냉전이 아닌 량전(涼戰)속에서 시장이냐? 이념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설 수 밖에 없다. 중국은 광대한 시장, 탁월한 인재, 효율적인 정부, 치열한 경쟁 및 비용에 무관한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전체 산업 체인을 확립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중국의 유니콘 기업수가 이미 미국을 초월하고 있으며 이는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도 중국 시장과 기업 트렌드 변화를 제대로 읽고 투자해야 한다. 100년의 변혁시기에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는 비단 중국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바이든 시대를 맞아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잘 생각해야 한다. 한국 내 변곡점이 왔다. 파도를 보지 말고 바람을 봐야하듯 중국을 포함한 세계시장과 기업의 트렌드 변화를 제대로 읽고 투자해 성공할 수 있길 바란다.



사무국 일지(1.25 ~ 1.29)

| | | | |
|-------------|--------------|-------------|-----------------|
| 1.25 (월) | ● 전남지노위 심판회의 | 1.29 (금) | ● 제1505회 금요조찬포럼 |
|-------------|--------------|-------------|-----------------|

1. 노사 동향

■ 고용노동부는 2021년 근로감독시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한다는 방침

○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 2021년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면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 2021년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노무관리지도,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등의 방식으로 운영 예정이며 구체적인 감독 방법은 추후 발표 예정

[참고]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정기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예방 목표 ▲ 코로나19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선(先) 자율개선 → 후(後) 현장점검」 원칙에 따라 실시 |
| 수시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노동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취약한 업종과 분야를 발굴해 근로감독 실시 및 기획 ▲ 반복·상습체불 근절에 주력 |
| 특별감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에 대한 폭행, 상습적 폭언,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대상 실시 |
| 노무관리지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중소기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 관리지도를 실시 |
|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에 대한 구제를 위해 운영해 오던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상반기까지 연장 운영 |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노동존중실천의원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은 1. 20 기자회견을 열고 상병수당 도입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을 발표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상병수당 오·남용 방지를 위해 소득상실 4일째부터 지급(대기기간 3일), ▲질병·부상 전 3개월 소득 비례 수당,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
- 정춘숙 의원은 작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과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상병수당까지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어 기업과 국민에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

■ 한국노총은 유연근로제 확대에 따른 대응지침 발표

-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산하 조직에 ‘유연근무제 확대 대응지침’ 시달(1. 25)
 - 탄력근로시간제와 관련해 ▲도입 및 시행은 반드시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결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도변경 사항은 노사합의로 정할 것, 선택적근로시간제와 관련해 ▲1일 최대 근로시간 한도 설정 등의 내용을 포함
 - 개정법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지침 내용과 달리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및 시행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탄력적근로시간제 중도변경 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1일 최대 근로시간 한도는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운영시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2. 법제 동향

■ 안호영 의원(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 21)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사전 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 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

■ 최승재 의원(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 21)

-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효과가 지역 특성에 맞지 않아 실효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 시 적용되는 일괄적 규제는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우려
-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의무휴업과 등록 제한, 영업장소 제한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실효성을 제고
- 또한 기존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제한이 필요한 ‘상업보호 구역’ 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업진흥구역’ 으로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며, 지역 내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상권정보시스템 등 필요한 정보 제공

■ 이수진 의원(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 25)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여전히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은 상황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이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민간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1%부터 3.5%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

■ 이수진 의원(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 25)

- 최근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문제, 낮은 위탁 단가에 따른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
-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는 원사업자 회사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수급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 노사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도급이 행하여진 경우 원사업자의 노사협의회에 수급사업자 노사협의회의 위원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사항에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

■ 김민석 의원(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 25)

- 현재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지원이 부처 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한 실정
-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백혜련 의원(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1. 27)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연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행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되고 취업 역시 불가능

Ⅲ. 노사 및 법제동향

- 이에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생계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